

교육부-靑, 로스쿨 타협점 찾을까

# 지역배려 원칙·추가 선정 입장차 여전

### 교육부 “추후 논의” 제안에 靑 긍정 검토 발표 시간 등 못정해 연기될 가능성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청와대와 교육부가 어떠한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2009년 개원 시점에 맞춰 ‘경남 1곳’ 등 추가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교육부는 추가 선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 2천명과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 선정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제3의 대안’을 놓고 막바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청와대에 로스쿨 총정원 2천명과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일단 유지하되 추가 선정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확정안 발표때 지역 배려 원칙에 따른 추가 선정 문제를 추후 협의한다는 “단서”를 넣는다는 것이다.

잠정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발표하되 추가 선정 문제는 총정원 확대 또는 개별 정원 조정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2009년 개원 시점에 맞춰 일부 대학을 추가 선정한다는 것은 기존 선정 대학의 정원을 다시 조정해야 하고 탈락 대학들의 반발에 기름을 붓는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이 같은 교육부의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의 경상대만 추가 선정될 경우, 경남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에 부담이 되는데다 탈락 대학들의 반발만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정안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는 잠

정안 유지 방침을 천명하며 4일 발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4일 오후 발표 시각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청와대 역시 “최대한 노력하되 발표 시점을 늦출 수도 있다”고 시사하며 연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대립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대학가에선 2009년 3월 개원 일정을 연기하고 2010년 이후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로스쿨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예비인가 여부에 상관없이 많은 대학들이 제각기 불만을 표출하며 ‘로스쿨 선정 및 개원 연기’ 등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 2009년 로스쿨 개원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상경시위 경찰 대처

교육부의 로스쿨 선정 발표를 앞둔 3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 후문에서 상경시위를 벌이려던 조선대학교 교직원들이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경찰이 시위를 불허하자 청사 인근 미

/연협뉴스

## “靑 수석의 로비와 반칙으로 원칙 충실했던 조선대 탈락”

김승용 교수, 대통령에 이메일

현직 대통령 자문위원인 조선대 교수가 ‘로스쿨 선정의 불합리함’을 글로 적어 대통령에게 보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교육·문화분과)인 조선대 김승용(53·경영학부·사진) 교수가 지난 1일 청와대브리핑(www.president.go.kr)의 ‘대통령께 이메일을’ 코너에 장문의 편지를 쓴 것.

지난해 말까지 조선대 기획조정실 이메일을 맡으며 로스쿨 유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김 교수는 “오늘(지난 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을 뵈어야 할 날이지만 학교의 명운이 걸린 상황이

라 구성원들과 함께 학교를 지키며 이 글을 쓰고 있다”며 “기가 막힌 기사를 접했기 때문”이라고 운을 뚫었다.

지난 1일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기가 막힌 기사”는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원광대의 로스쿨 선정을 위해 익산 출신 인사를 법학교육위원으로 밀었으며 최근 5년간 사법고시 합격자 수가 선정기준에 반영되도록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김 교수는 “청와대 홍보수석 한 사람이 로비할 때, 시골스럽고 우직한 조선대는 가난한 살림살이를 털어 최고의 설비와 교수진, 장학금 등을 마련하고 있었다”며 “결과는 로비와 반칙의 승리”라고 적었다.

그는 “특권과 반칙을 미워하고 원칙과 상식에 충실했던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님을 믿고 싶다”며 “며칠 남지 않았지만 반칙이 패배하고 원칙과 상식이 결국 승리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보여달라”고 썼다.

김 교수는 “미래 인력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의 본 취지가 ‘과거 거둬온 권력’로 변질됐다”며 “조선대는 전문 도서관, 기숙사, 장학기금, 연구기금 등 기준들이 발표될 때마다 차근차근 준비했는데 갑작스럽게 사시 합격자 수 등과 같은 기준들이 생겨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편지를 썼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윤승용씨가 개입 실패 했으니 무효”

‘로스쿨 의혹’ 네티즌 반발 확산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심사를 맡은 법학교육위원 선정에 윤승용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네티즌들이 갖가지 반응을 내놓고 있다.

충산에서 익산을 지역구로 출마 예정인 윤 전 수석은 지난달 31일 뉴스 제공 통신사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구성된 로스쿨 관련 임시 TF팀에 참여해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 선정 과정에서 홍보수석 몫으로 배정된 언론계 추천 인사를 익산 출신 인

사로 밀어 심사시켰다”며 익산의 원광대가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를 받은 공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의 기사가 뜨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댓글을 단 네티즌 ‘chung1826’은 “홍보수석이 솔직하게 압력 넣었다고 선언했으니 이것은 무효다. 모든 국민과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로스쿨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고시 합격자 수”라는 로스쿨 선정기준을 윤 전 수석이 주장해 심사시켰다는 말에 대해 ‘jazzy7408’은 “원광대의 최근 사시합격자가 많아진 것은 다른 학교 사시 1차 합격생을 편입학시킨 후 2차 시험 비용을 장학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윤 전 수석의 홈페이지(seungyong2008.com) 게시판에도 네티즌의 원성이 쏟아졌다. 네티즌 ‘북도인’은 “로스쿨과 관련해 원광대와 윤 전 수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해명을 위해 스스로 검찰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썼다.

아이디 ‘박주형’은 “로스쿨 문제로 같은 호남인 전남·전북이 앙숙이 돼 가고 있다”며 “영남권에 부산대, 동아대, 경북대, 영남대라던 호남권에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원광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라고 적었다.

원광대도 이 같은 교육부의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의 경상대만 추가 선정될 경우, 경남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에 부담이 되는데다 탈락 대학들의 반발만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정안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는 잠정안 유지 방침을 천명하며 4일 발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4일 오후 발표 시각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청와대 역시 “최대한 노력하되 발표 시점을 늦출 수도 있다”고 시사하며 연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대립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대학가에선 2009년 3월 개원 일정을 연기하고 2010년 이후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로스쿨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예비인가 여부에 상관없이 많은 대학들이 제각기 불만을 표출하며 ‘로스쿨 선정 및 개원 연기’ 등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 2009년 로스쿨 개원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프레지던트호텔 18층에서 긴급 비상총회를 갖고 로스쿨 심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예비인가 거부 취소 처분 등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연협뉴스

## 교육부, 로스쿨 점수 공개 ‘고민’

“추후 논의 거처 심사 결과 공개 여부 결정”

대학들 반발로 한발 물러서... 귀추 주목

법학교육위원회가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심사 평가 점수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전에 공개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최근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추후 논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이 공개된 뒤 대학들의 반발이 날로 거세져 교육부가 입장을 바꿔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대학들의 저항에 정면 대응하려는 ‘맛볼 작전’을 펴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대학원개선팀 관계자는 “당초 심사 점수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추후 검토를 거쳐 점수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대학들의 반발도 있고 일각에선 이에 ‘교육부가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 명확한 입장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공개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혀 검토하거나 결정된 바 없고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심사점수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교육부가 이처럼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가 알려지면서 심사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은 대학들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비인가 대학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대학들은 저마다 심의가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심의기준 자체도 잘못됐다며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심사자료 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대학가에서 제기되는 등 로스쿨 선정 근거를 둘러싼 ‘괴소문’마저 난무하

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청와대가 즉각 나서 “윤승용 전 수석의 발언은 과장된 것이며 청와대 차원에서 법학교육위 위원 선정에 관여한 바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심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심사점수 공개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 교육부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사무총장(동국대 교수)은 “의혹을 해소하려면 단지 심사점수뿐 아니라 왜 그 점수가 매겨졌는지, 모든 평가 기준까지 다 공개하라는 것이 대학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프레지던트호텔 18층에서 긴급 비상총회를 갖고 로스쿨 심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예비인가 거부 취소 처분 등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연협뉴스

# 실날 선물 - 안동 간고둥어

안동 간고둥어

전국택배 054)859-0571
www.godunga.co.kr  
054)859-0715
전국 이마트에서도 선물포장 합니다.